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9. 17.(일) 12:00 (2023. 9. 18.(월) 조간)

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

- 고용노동부,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·점검(10.4.~11.30.) -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**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, 건설현장 채용강요** 등에 대해 10.4.~11.30. **하반기 집중 지도·점검**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점검대상은 **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, 건설사업장 200개소** 등이다.

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, 부모의 직업·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·반환·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**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**한다.

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**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**는 계획이다.

아울러,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**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(TF)」*('21.10월~, 관계부처 합동)의 적극적인 활동**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, **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** 방침이다.

* 국조실 주관, 고용부·국토부·공정위·경찰청 참여 → 채용강요·기계사용 강요·업무방해 등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대응

한편, 이번 집중 지도·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.5.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**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**이며, 상반기*에 이어 **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**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.

* 상반기 점검결과: 200개소 점검,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, 시정명령 3, 개선권고 77

이정한 고용실장은 "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,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"라며, "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**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**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, **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**시켜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	구현경 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강순형 (044-202-7443) 서동윤 (044-202-74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**워크넷 구인 사업장 점검 대상 및 법률 주요 내용**

□ 점검 규모

○ 워크넷을 통해 채용 공고한 사업장 약 200개소

□ 점검 대상

❶ 워크넷 채용공고의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.채용절차법 신고센터 접수 사업장

❷ 점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구인 사업장

❸ 기타 워크넷 공고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□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	제재수단
거짓채용광고 금지	▪ 채용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	•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채용광고내용·근로조건 변경 금지	▪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▪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	•5백만원 이하 과태료
채용강요 등 금지	▪ 채용 관련 부당 청탁·압력·강요 및 금전·물품·재산상 이익 제공·수수 금지	•3천만원 이하 과태료
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	▪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①용모·키·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 ③직계존비속/형제자매 학력·직업·재산	•5백만원 이하 과태료
채용심사비용	▪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	•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
채용서류 반환 등	▪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▪ 반환 청구기간 도과 경우 및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▪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미부담	•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
	▪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▪ 서류 반환, 폐기 등의 규정 고지 미이행	•3백만원 이하 과태료
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	▪ 기초심사자료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) 표준양식 사용 권장	
전자방식 서류접수	▪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	
채용일정 및 과정·채용여부 고지	▪ 채용일정·심사지연사실·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	
입증·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	▪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·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	